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2월 27일(화)

윤석열 대통령,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

-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 -
- 대통령, 의사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 대통령, 아이 돌봄에 지역 간 차이 없어야 -
-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를 만들어 총력 지원에 나설 것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7, 화)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불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의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로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참고: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선정 현황(2/26, 월 기준). <끝>

참고

'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선정 현황 (2/26, 월 기준)

시도 교육청	전체 초등학교 수(a)	늘봄학교 수(b)	비율(b/a)	시도 교육청	전체 초등학교 수(a)	늘봄학교 수(b)	비율(b/a)
서울	608	38	6.3%	강원	349	84	24.1%
부산	305 ※ 1교 휴교	304	100.0%	충북	255	100	39.2%
대구	232	70	30.2%	충남	413	118	28.6%
인천	262	60	22.9%	전북	420	75	17.9%
광주	155	32	20.6%	전남	428 ※ 2교 통합폐교 1교 국립	425	100.0%
대전	149	45	30.2%	경북	473	152	32.1%
울산	121	24	19.8%	경남	508	159	31.3%
세종	53	25	47.2%	제주	114	55	48.2%
경기	1,330	975	73.3%	계	6,175	2,741	44.3%

※ 전체 초등학교수는 '23.4월 교육기본통계 기준